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협동 과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구축 연구	이상민
수시 과제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방안 기획 연구	여혜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심경미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서수정
수탁 과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 연구	유광훈

협동과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구축 연구

최근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농어촌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농식품부·산림청 등 다양한 관련 부처에서 농어촌 경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토경관 차원에서는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2014년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쳐 국토경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와 수단을 마련하고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비도시 지역 개발규제나 농지 및 산지전용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각종 개발로 인해 농어촌 경관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즉 농어촌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의 토지이용, 건축물, 경관사업 등 다양하고 넓은 차원에서 경관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본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농어촌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과의 협동연구를 진행하여, 국내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 토지이용을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국토의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토경관의 향상은 물론이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①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방안 기획 연구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총 685만여 동 가운데 54%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건축물 노후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간 주택의 양적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 등은 정체 국면에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22개 지구가 해제되었는데, 해제지역의 규모만 해도 2,402만 1,000㎡(건축물 28만 2,000동)에 이른다(2014.12. 기준).

이러한 여건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 지원은 대규모 건축물 정비에 대한 제도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고, 소규모 건축물 정비사업에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실제 노후 단독주택이 필지는 대부분 좁고 부정형이며 도로가 없는 맹지로, 필지단위 건축물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치중하고, 개별 건축물에 대한 정비지원은 없어서 필지단위 정비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민 간 협정을 맺어 건축물을 정비할 경우 필지별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 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주는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실효성 검증과 홍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협정지원센터로 지정하고, 12월에는 서울·부산·군산·영주에 시범사업지를 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협정지원센터의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고 건축협정제도에 관한 지자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기획하여 올해 수행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혜진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특성화와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서 건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대적인 활용을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및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6.3. 공포)하였다. 본 법의 제정으로 비문화재인 건축자산의 면단위 관리 제도로써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마련되었다. 본 법률이 2015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대상 및 기준,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기존 제도와와의 중첩운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고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담당자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이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개념과 운영방안을 소개 정리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 및 계획수립 지침 내용을 분석하여 매뉴얼 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14년에 진행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에서 제안한 제도의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방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매뉴얼 제공을 통해 아직까지 생소한 ‘건축자산’ 개념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를 폭넓게 이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경미

③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의해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이 발표되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이 선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적 도시재생모델 정립과 도시재생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였다.

선도지역은 선정 이후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계획수립과 관련한 운영기준(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사업시행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함께 추진하였다.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도지역 선정과 함께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리뷰보드 운영에 관한 관문심사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중심의 물리적·사회경제적·문화적 재생이 종합적으로 수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도시재생특별법만으로는 사업집행이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올해부터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국비지원 사업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을 비롯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비롯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선방안과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 건축특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등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수정

수탁과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 내용을 규정하지 않거나 위임 범위를 위반한 경우가 많아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 구성 체계와 내용이 상이하여 건축기준의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유권해석의 경직성, 지자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등은 건축행정의 만족도 하락, 임의규제의 발생, 건축행정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적 신뢰성 확보 및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건축 기준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 위임 건축법령 조문 검토, 「경관법」 조례 가이드라인 등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 현황 분석, 현행 지자체 건축조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려 한다. 아울러 지자체 건축행정 관련 중소기업 옴부즈맨 접수 민원, 규제개혁위원회 접수 민원, 국토교통부 접수 관원·민원 등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건축행정의 원인을 도출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내용의 명료화, 규제 모니터링 강화, 건축행정 규제관리 정보체계 구축, 건축법령 개정방향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자체 건축조례의 법적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확립하고, 건축행정에 관한 불편사항과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의 보호와 경제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홍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 ‘한옥, 함께 쓰기’ 개최

‘2015 auri 국가한옥센터 제1차 한옥포럼’이 지난 4월 24일(금)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렸다. ‘실속 있는 한옥’이라는 큰 주제 아래 첫 번째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제해성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옥, 함께 쓰기’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앞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민경 부연구위원이 올해 진행될 3차례 포럼(‘한옥, 함께 쓰기’, ‘한옥, 살아 보기’, ‘한옥, 지어 보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발제자인 조호균 소장(건축사사무소 유애펜)은 ‘공공건축물에서 한옥의 가능성을 보다’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한옥 공공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폐가한옥의 스마트한 활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이상묵 대표(Z_Lab)는 지역과 소통하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소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은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옥 공공건축물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인력, 예산, 시설관리, 이력관리 등의 운영 관리 계획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인호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김용미 대표이사(금성건축사사무소),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

경관과), 김진환 팀장(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박준영 연구위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은복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정책적 과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였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사협회·새건축사협의회·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후원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 서울 대한건축학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발표한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2015~2019)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 구현’과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실현’을 위한 3개 목표(▲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육성)와 9개 추진전략, 24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는 국민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을 위해 제도 기반 구축, 건축안전인식 향상 및 역할 강화, 범죄예방환경 설계 적용 확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공간 조성 확대 등이 실행과제로 제시되었다.

공청회의 토론에는 좌장인 운영태 교수(경희대학교 건축학과)와 박소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공희 교수(국민대학교 건축학부), 이정면 대표(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강인호 교수(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김상문 과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관계 공공기관 실무자, 건축·도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업계 종사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토론에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계약제도 개선, 대가기준의 현실화 등에 대한 많은 논의와 의견 제안이 있었다.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건축·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을 질적 성장시킬 수 있는 건축정책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 주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 공청회'가 지난 5월 22일(금)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4층 중연회장에서 열렸다.

조상규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 (2016~2020)은 '쾌적한 삶터와 문화가 융성하는 창조적인 세종시 구현'을 위한 3개 목표(▲행복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건축산업의 진흥과 친환경 세종 구현 ▲신구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창출)와 6개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전략 과제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치밀 마련 및 활용계획 수립, 세종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및 시범운영, 건축협정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마을 조성 이렇게 4개 사업이 제시되었다.

공청회에는 좌장인 도용호 교수(중부대학교 건축학과)와 권영상 교수(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병일 대표(세종건축사사무소), 강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추용욱 부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 이병연 교수(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김태곤 건축과장(세종특별자치시청)이 패널로 참석하여 관계 공공기관 실무자, 건축·도시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업계 종사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과 함께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은 7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수정·보완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최종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후원한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이 지난 6월 19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2014.11.~2015.2.)'와 관련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의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조상규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통계로 살펴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 발표를 통해 2013년 건축서비스산업 규모는 2007년 대비 사업체 수(39.7%), 종사자 수(28.8%), 매출액(60.2%) 부문의 평균증가율을 볼 때 꾸준히 커지고 있으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전 부문에 걸쳐 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의 약 44%가 소수의 대형 사업체(16개)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국내 GDP의 10%에 육박한 건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건축서비스의 낙후된 사업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 추진과제(▲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산업성장 인프라 구축 ▲신규 해외 진출 강화)를 제안하였다.

한편 2030년 국내 건설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한 이홍일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동안의 건설시장은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 위주였으나, 향후 노후 주택 등에 대한 재개축 및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후 운영태 교수(경희대학교 건축학과)가 좌장으로 이끈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박인석 교수(명지대학교 건축학부), 윤혁경 대표(A&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서규석 대표이사(선구조엔지니어링), 이강호 대표(에시트종합건축사사무소), 박형재 사무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총 8인이 학계, 연구소, 업계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패널은 토론에서 건축서비스산업 범위의 확대·소규모 건축설계시장 개선, 적정 설계대가 책정, 유지·관리시장 확대에 대한 대응, 계약체계 개선, 대학의 건축교육 개선 등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포럼에는 관계 공공기관 실무자, 학계·업계 종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에 대한 의견 제안을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5년 7월 공고 예정)에 일부 반영된 사항으로 계획 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도 마련하여 정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6월 25일(목)과 26일(금) 양일간 광주광역시 프라도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축도시정책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지난해 5월에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행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적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행사는 '제2차 건축정책 방향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채 수립되는 점, 계획 범위 및 타 분야 계획과의 불분명한 관계, 세부 실천사업별 예산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와 계획 내용에 비해 실행계획이 부실한 점 등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다양한 정책계획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건축기본계획을 국가시범사업 공모와 연계하는 등의 사업예산 확보 방안과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외부기관을 전담지원 기구로 지정하는 등의 계획 실행력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역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2015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 제1차 지식강연회를 4월 7일(화), 제2차 지식강연회를 5월 29일(금)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auri 지식강연회는 연구원에게 다양한 지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지식강연회는 다양한 연구방법론 소개와 이를 적용한 연구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방법론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 4회를 비롯하여 정부 3.0교육, 연구윤리교육 및 청렴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소는 이를 통해 연구방법론 개선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5년 제1차 지식강연회는 '정부 3.0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최흥석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정부 3.0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한계와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연에서 최 교수는 "법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고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 증가된 데 비해 활용 지원체계의 가동이 미진해 공공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개방이 미흡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공공데이터 콘텐츠를 잘 알고 있는 사업부서가 관여해야 하며, 나아가 사업부서와 사용자가 연결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제2차 지식강연회는 '설문조사의 저 문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올해 지식강연회는 연구방법론 개선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방법론의 이해'라는 주제로 총 4회의 강연이 열린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그 일환으로 구성된 강연 중 하나이며, 이번 강연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 가운데 '설문조사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이자 「설문조사-처음에서 끝까지」의 저자인 최종후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였다. 강연은 선거 출구조사와 시청률 조사 등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 각 조사방법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였으며, 조사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사례로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를 지적해 주었다. 통계프로그램 SPSS를 통한 신뢰도 분석방법과 통계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 작성의 일반적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설문조사방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에서부터 실질적인 적용 사례까지 설문조사방법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서울특별시 업무협약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는 지난 5월 22일(금) 보행친화도시 조성 공동추진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실제 사업
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공공협력 사
례로, 지자체 보행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향후 ▲서울시에서 시행된 보행사
업에 대한 모니터링 공동 수행 ▲보행사업 모니터
링에 필요한 자료공유 및 행정지원 ▲보행 관련제
도 개선 ▲보행사업 자문 및 설계지원 등 관련 분야
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3년 서울시 보
행자우선도로·아마존 시범사업의 보행환경 개
선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보행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의 기본계획, 사전 모니터링, 설계 자문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사후 보행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상 2014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안
(구로구 경인로 15길)

하 2014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후 모습
(구로구 경인로 15길)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워크숍'이 지난 4월 9일 (목)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은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 기획·운영 단계에 있어 관련 전문가가 지역총괄계획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총괄계획가가 지역의 건축·도시 관련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 및 조언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지자체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8개 지자체(서울 서대문구, 경기 평택시, 대구시 남구, 세종특별자치시, 인천시 옹진군, 전북 임실군, 전북 익산시, 강원 평창군)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공무원·지역총괄계획가)의 이해 증진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참여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하동군 민간전문가로 활동 중인 안재락 교수(경상대학교)가 하동군 민간전문가 사업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심경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2015년 지원사업 운영 방향 및 모니터링 방안을 소개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지자체의 역할, 성과관리 등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전달하였다.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는 민간전문가 활동 과정에 대한 충분한 기록과 민간전문가 스스로 활동을 설명·평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주로 지자체 지원 사항, 사업의 성과보고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었다.

본 지원사업은 1차로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통해 차기년도 연속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각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활동내용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2015 국가공공 건축지원센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실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2013년 6월 5일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지난 4월 28일(화), 30일(목) 양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28일)와 대전광역시(30일) 두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좋은 공공건축 기획의 조건을 살펴보고,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작성 요령과 설계발주 적용 시 주안점에 대한 정보를 교육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생활 속의 공공건축’을 주제로 한 정준철 책임(주)해안건축)의 건축설계 분야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에 이어 김은희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작성 요령’, 염철호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설계발주 적용 주안점’을 발제하였고,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정준철 책임은 공공건축이란 무엇이며 좋은 공공건축 설계기획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러한 기획의 실제 건축 과정은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는지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이어 김은희 부연구위원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의 목적과 절차 등 주요 내용을 비롯해 사전검토의 현황과 효과를 소개하고, 발주기관이 해야 하는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철호 연구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의 설계발주 방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설계발주 방식인 ‘설계공모 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과 관련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20개의 국가기관, 111개의 지방자치단체, 12개의 공공기관, 5개의 지방공기업, 그 외 3개의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모두 151개 기관에서 346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향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질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